 <b>환경부</b>	<b>보 도 자 료</b>		보도시점	자료배포일	매수
			'08.3.20(목) 중간부터 ※ 보도시 출처 명기	'08.3	4 (사진 매)
	담당 부서	기후대기정책관실 기후변화협력과	이민호 과장 / 곽은교 사무관 02-509-7950 / 011-9126-6580 02-509-7952 / 011-9653-7055		

## 환경부-광주광역시 수원 과천시와 탄소 포인트 제도 시행 합의

- ◇ 지자체의 가정·상업시설 대상 온실가스 감축정책 가속화
-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부문 대상으로 시행
- ◇ 향후 국가배출권거래제와 연계 운영 검토

□ 환경부와 광주광역시, 과천시, 수원시는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 배출권 시장 구축 활성화 방안으로 가정·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포인트 제도”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 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은 지자체가 참여하는 제도 추진운영단을 구성, 3월부터 관련시스템 구축 및 참여자 인센티브 방안 등을 마련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 “탄소 포인트 제도”는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 상업시설 운영자가 저감활동 실적을 운영센터(환경관리공단)에 등록하게 하고,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함과 동시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 사업 적용범위는 1단계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부문에 대해 우선 실시하며, 향후 개인의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환경부는 동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센티브를 다양화하고, 유사제도를 운영중인 영국, 일본 등과의 경험 공유 등 협력을 통해 선진사례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 현재 검토중인 인센티브로는 참여주민에게 공공시설물 이용 바우처 제공, 市 운영 교육프로그램 우선 지원 및 모범시민 표창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할 예정이다.

□ 현재까지의 정부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은 대부분 산업부문에 치중되어 온 관계로 가정, 상업(건물) 부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저감정책 마련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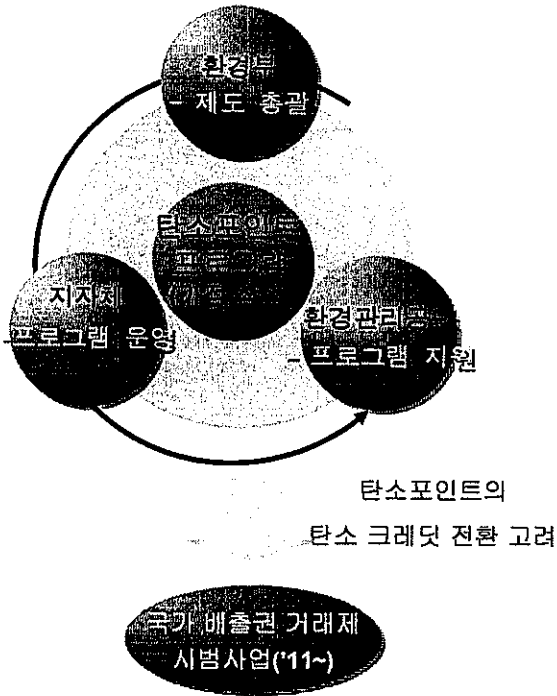
※ IPCC 제4차 보고서( '07)는 가정, 상업시설을 산업, 수송, 발전, 농업 등 타부문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가장 높다고 분석

○ 탄소 포인트 제도 운영을 통해 그간 간과되어온 가정 및 상업시설에서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시키는 등 비용효율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는 앞으로 광주광역시, 수원시, 과천시의 사업 결과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제도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참고>

### □ 기관별 역할



구 분	역 할
지 자 체	포인트 제도 운영 및 관리
가정 및 상업	제도 참여 및 감축활동 실천 감축실적 등록
환경관리공단	운영센터 관리, 기술 및 정보제공
환경 부	초기예산 및 정책지원 제도화추진

### □ 인센티브 제공 방안

○ 1단계: 지역주민 의견을 고려한 지자체별 인센티브 제공(실무추진단 구축 후 지자체별 주민 의견 수렴 후 확정 예정)하는 방법으로 초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형태

○ 2단계: 국가배출권거래시장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 국가배출권거래시장에 탄소포인트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받는 방법으로 시장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형태

※ 탄소포인트와 국가배출권거래시장의 배출권과의 전환(Swap) 비율마련 예정

## □ 가정 · 상업 부문 감축잠재량

- IPCC 4차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건물 즉, 가정과 상업 부분의 감축 잠재량이 가장 크게 분석됨
-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는 가정과 상업부분이 배출량 저감에 가장 큰 기여
- 지자체가 국가 기후변화대응 감축정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음을 의미
- bottom-up 연구에 의한 2030년 톤당 탄소가격에 따른 각 분야별 감축 잠재량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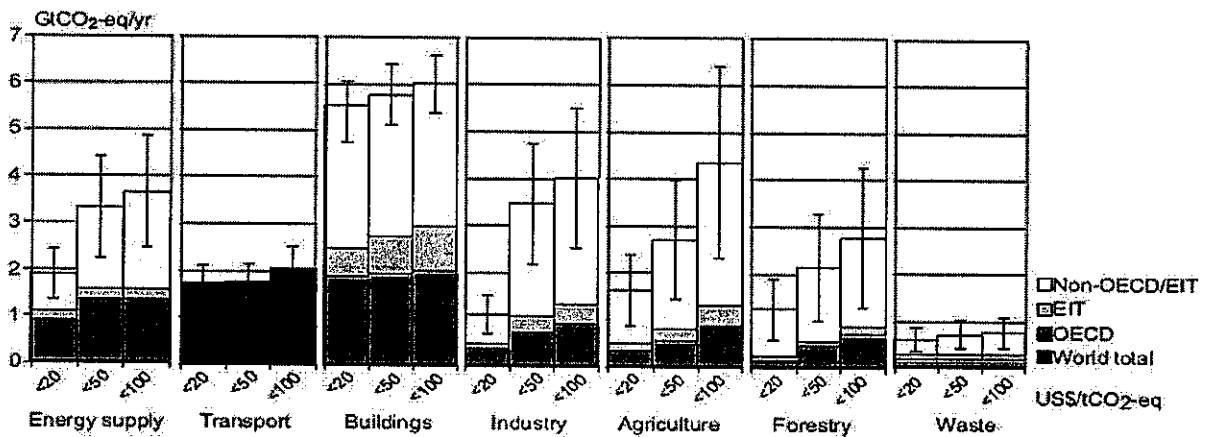


Figure TS.27: Estimated sectoral economic potential for global mitigation for different regions as a function of carbon price in 2030 from bottom-up studies, compared to the respective baselines assumed in the sector assessments. A full explanation of the derivation of this figure is found in Section 11.3.

Notes:

1. The ranges for global economic potentials as assessed in each sector are shown by vertical lines. The ranges are based on end-use allocations of emissions, meaning that emissions of electricity use are counted towards the end-use sectors and not to the energy supply sector.
2. The estimated potentials have been constrained by the availability of studies particularly at high carbon price levels.
3. Sectors used different baselines: For industry the SRES B2 baseline was taken, for energy supply and transport the WEO 2004 baseline was used; the building sector is based on a baseline in between SRES B2 and A1B; for waste, SRES A1B driving forces were used to construct a waste specific baseline, agriculture and forestry used baseline that mostly used B2 driving forces.
4. Only global totals for transport are shown because international aviation is included [5.4].
5. Categories excluded are: non-CO<sub>2</sub> emissions in buildings and transport, part of material efficiency options, heat production and cogeneration in energy supply, heavy duty vehicles, shipping and high-occupancy passenger transport, most high-cost options for buildings, wastewater treatment, emission reduction from coal mines and gas pipelines, fluorinated gases from energy supply and transport. The underestimation of the total economic potential from these emissions is of the order of 10-15%.